제222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답변**

# 최 선 희 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시대적 변화에 능등적으로 대처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대전을 만들겠습니다."

# *최선희의원

「시정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시장과의 일괄질문 · 답변을 1문 1답 방식으로 편집하였습니다.

## ◉ 최선희 의원

먼저, 심한 목감기로 목소리에 불편함을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최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153만 대전시민과 소통하며 시민 중심의 대전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권선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현장에서 총력을 다 하시는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은 대전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된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만큼 많은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153만 대전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대전으로의 자리매김을 기대해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몇 가지 문제에 해법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도시부 도로명 안내표지체계 전환과 관련하여 시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도로명 주소체계가 지난 1996년부터 준비되어 2014년에 전면시행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에서도 현행 도로표지의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로명과 노선번호 위주의 도로명 안내표지를 전국 도시지역에 한국형 도로명 안내체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안내표지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사용하는 방식으로 지난 1955년 관련지침이 만들어진 후에 현재까지 약 60여 년 동안 지명이나 시설명을 안내의 매개체로 하는 **목적방향 지점안내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복잡한 도시내 도로에서는 비효율적이며 길 안내의 한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한된 표지 면적대비 안내가 필요한 시설명이나 지명은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중요 시설물이 많은 지역에서는 시설물 선정이 어려우며, 중요도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어 원하는 시설이 안내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설명 안내로 판독성 및 가독성이 떨어짐으로 인해 일시정지, 서행 그리고 차선변경 등 교통혼잡 및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으로도 작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도로안내표지의 경우 지명안내의 불연속성으로 인하여 운전자의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설표지 난립으로 인해 도시미관까지 저해하고 있는 요소로 지적되어 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던 현행 도로표지 안내체계의 전환을 검토하면서, 앞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 및 한계성을 해소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새주소 체계와 일치시킨 도로명 안내방식으로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서울시 일부 자치구와 인천이나 대구, 세종 그리고 전주, 김천 등 주요 도시들 및 혁신도시 대상지에는 도로명 안내표지로 전환을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다른 시에서도 도입을 할 예정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뉴스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10시 54분 영상자료 설명개시)

(10시 57분 영상자료 설명종료)

시장님께서는 이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도로명 안내표지로의 체계 전환이 피할 수 없는 당면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 현재까지 이렇다 할 계획이나 대응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도로명 안내표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오랜 기간 사전 준비와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을 뿐더러,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정부에서 주도하는 선도 공모사업이나 시범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했어야 했습니다. 이는 도로명 안내표지를 도입함에 있어 예상 문제점을 사전에 발굴하고,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며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등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례로 지난 2012년 선도공모사업에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총사업비 50억 원 중 35억 원을 국고로 지원받아 약 20억 원의 시비를 경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강 건너 불 보듯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 정부에서 실무부서 설명회를 통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만 **시장께서는 우리 대전시의 도로명 안내표지를 설치하는 데 국고보조 없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국고보조에 대한 동향파악이 전혀 안 되어서 대응을 못 하신 것입니까?**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더 이상의 국고보조계획이 없다며, 아쉽게도 현재로써는 자치단체 예산으로 도로명 안내표지를 교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국형 도로명 안내표지 체계 전환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소극적인 대응에 매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과 관련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 주요도로 교차로를 대상으로 교체 시 약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전시는 이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관련하여 시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권선택 시장

최선희 의원님께서는 도로명 안내표지의 전환과 행복충전소 관리인력 처우개선 등 5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해서 치밀한 분석과 대안을 주시는 점에 대해서 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도로명 주소 체계가 2014년 전면시행됨에 따라서 도로 안내표지를 도로명 안내표지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나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비지원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예산마련 등 우리 시의 대책은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현행 도로법상 도로명 안내표지 설치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기존의 지명·시설명 위주 안내방식과 새로운 도로명 주소에 따른 도로명 노선번호 위주 안내방식의 혼용을 허용함에 따라서 그동안 국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존 도로 안내표지의 문제점의 해소와 도로명 주소와의 일관성 확보 차원에서 도로명 안내표지 전환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정비대상 표지판은 총 1,900개입니다. 그중에서 15개가 완료가 됐고 1,845개소로써 약 7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서 국비 확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 최선희 의원

**다음은 전동보장구인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에 관한 사항입니다.**

휠체어는 질병이나 사고로 다리가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을 이송하는 데에 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인 동시에 최근에는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도 이동의 편리성을 제공해주는 대표적인 보행 보조수단입니다. 장애인과 노인 등의 사회활동 영역이 확대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전동보장구 보조금은 지난해에는 7만 4,000대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늘어나는 장애인구,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 OECD 국가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교통사고율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특성상 전동보장구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과 노인이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동보장구 운행 중 안전성 확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11시 01분 영상자료 설명개시)

(11시 03분 영상자료 설명종료)

정부는 지난 2005년 이후 장애인과 노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겠다며 전동보장구를 보급하기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보호 대책이 없습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동보장구 이용자 중 46.5%가 사고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로 분류되지 못하고 보행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손해보험에도 전혀 가입이 안 되어 보도로 다녀야 합니다. 하지만 정비되지 못한 보도의 노면상태와 각종 장애물,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오늘도 사고 위험을 무릅쓰고 도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전동보장구는 중량이 90kg 가량으로 시속 15km/h 속도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제동거리가 3.5m로 길어 돌발 상황이 닥치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의 부상과 물건 파손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동보장구 이용자는 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안전 대책에 아예 손을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전동보장구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은 전동보장구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도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선 전동보장구의 목숨을 건 위험한 질주를 막을 안전 대책이 시급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권선택 시장

두 번째, 전동보장구는 보행자로 분류되어 보도로 통행하여야 하는데 보도의 노면상태 및 각종 장애물과 불법차량으로 사고위험을 무릅쓰고 도로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목숨을 건 위험한 질주를 막을 수 있는 보도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시는 보행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난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9개의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도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2개 지구에 40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지구도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보도의 단차와 요철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도 위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교통문화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먼저 가슈” 교통문화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동보장구 이용자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 ◉ 최선희 의원

**둘째, 전동보장구 충전기를 관리하는 행복충전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동보장구 이용자는 장시간 사용함에 따라 배터리 소모량이 많아 운행 중 충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충전소가 없어 방전의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대전시는 전동보장구 배터리 급속 충전을 위한 행복충전소를 49개소에 59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충전소는 시립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협회, 지체장애인협회 등 사업기관과 연계해 운영하며 충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이 관리하도록 하는 복지일자리 제공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와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충전소 관리 인력 급여는 월 44시간 근무에 20만 원으로 시간급 4,540원을 받습니다. 현재 2015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5,580원으로 1,040원이 미달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는 장애인들에게 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어려운 장애인들에게는 자립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제대로 자립할 수도, 생활할 수도 없을 정도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행복충전소도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행복충전소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 ◇ 권선택 시장

다음은 행복충전소 관리인력은 월 44시간 근무에 20만 원을 받고 있으나 이는 시간당 4,540원으로 최저임금 5,580원에 비해서 1,040원을 적게 받고 있기 때문에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복충전소는 장애인의 이동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장애인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타 시·도와 차별화된 우리만의 고유 시책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자리 급여로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이 지금까지는 정규 직업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보충적 성격으로 인식해서 임금을 책정해 왔습니다. 앞으로 행복충전소 근무인력이 보다 나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단가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 최선희 의원

대전시 행복충전소 설치장소 현황은 홈페이지 생활정보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운행 중 설치장소 위치를 확인할 수 없어 활동공간에 제약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의 경우 스마트 서울맵에 급속충전기 위치확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외출 시 충전기 배터리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기능저하와 방전 등의 걱정을 해소했다고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처럼 대전시도 행복충전소 위치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활동공간에 제약 없이 보다 편하게 외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전시는 행복충전소가 지하철역, 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 장애인과 노인이 이용을 많이 하는 공공시설인 구청과 주민센터 등에 설치하여 편리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과 노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인 구청과 주민센터 등에 설치가 되어 가까운 곳에서 충전할 수 있도록 편리성이 도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은 시대변화에 적극적인 대응과 우리 사회의 교통약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당부드린 것으로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권선택 시장

다음은 행복충전소 설치의 위치를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홍보하고 있으나 운행 중에는 위치 확인이 어려우므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제공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대전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행복충전소 위치정보를 시 홈페이지 및 장애인 복지단체, 사업기관 등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 시도 서울시 사례를 분석해서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전동보장구 설치장소 앱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설치장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대전시의 행복충전소는 복지관 등 49개소에 59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전시의 입장이 어떤가 물으셨습니다.

행복충전소는 2011년 설치 당시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하철역,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장애인단체 사무실 등 장애인이 비교적 많이 이용하는 시설·단체를 중심으로 설치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어르신 등 전동보장구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설치장소를 말씀하신 대로 구청이나 주민센터 등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